

보육시설 건축용자 '그림의 떡'

전액담보 요구등 조건 비현실적...신청 거의 없어

김미경 기자

민간 보육시설의 건축·설치·기능 보장을 위해 국민연금에서 1천5백억원을 융자해주기로 한 계획의 융자신청 마감일이 8월10일로 다가왔지만 신청 실적이 크게 부진해 조건완화 등의 개선택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보사부가 지난 6월 발표한 연리 9%, 5~2년거치 10~3년 분할상환 조건의 이 융자계획은 민간 보육시설에 대한 정부 차원의 육성책이라는 점에서 큰 환영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27일 현재까지 접수된 신청 실적은 극히 미미하다.

보사부 아동복지과 한상진 사무관은 "경남지역에서 6건 8억4천만원이 융자신청된 외에 다른 융자신청 사실을 통보받지 못했다"고 밝히고 있다.

서울 도봉구청 가정복지과 박선례씨도 "담보는 어느 정도 돼야 하느냐" "평당 얼마 정도까지 용자가 가능하느냐" "융자 자격기준이 어떻게 돼 있느냐" 등의 문의는 줄을 잇고 있지만 신청은 아직 한 건도 없다"고 말

한다.

이런 현상은 현재까지 월세나 전세 등으로 어렵게 살림을 꾸려온 민간 보육시설들이 융자전액에 해당되는 담보를 요구하는 이 융자에 선뜻 신청서를 내기 힘들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인천 민간보육시설연합회 한숙희 회장은 "융자액 100% 담보를 마련하기 어려운 대부분의 보육시설들이 전세금 담보 융자를 원하고 있다"며 융자조건 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또한 신용대출 조건도 평화은행 또는 농협에 월평균 2백만원 이상의 잔고를 갖고 있는 경우로 한정돼 있어 이런 조건을 충족시킬 만한 보육시설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지난 7일 '보육시설 장기융자

에 대한 설명회'를 열었던 지역 사회탁아소연합회(회장 최현숙) 측은 "이번 융자계획은 결코 나쁜 조건은 아니지만, 어려운 상황에서 꾸려온 보육시설들에게는 아직도 '어려운 조건들'이라며 이자율을 좀더 낮추는 방안 등도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여성근로자 및 보육대상아동이 많은 사업자, 기업이 공동으로 보육시설을 설치할 경우, 보육시설이 없거나 수용자에 비해 시설이 부족한 지역, 영아 및 야간보육시설 설치시 등의 차례로 돼 있는 융자 우선순위가 보사부의 융자대상 선정과정에서 제대로 지켜지도록 감시할 수 있는 심사위원회 구성 등의 작업도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섬섬섬

전국 65곳의 해수욕장, 싱그러운 풍치 등 볼맛
넘치는 사진과 함께 갯배새 물썬 풍기는
섬여행 길잡이

한겨레신문사 발행